합의는 했지만…계파 이해따라 찬반 갈려

■ 새정치 혁신안, 중앙위 통과 안팎

평가기준·객관성 등 문제 제기…"의원들이 학생이냐" 불만도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예상과는 달리 혁신안이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추후 공천과 관련된 혁신안 의결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김동철, 황주홍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 직격탄을 날린 반면 강기정, 이개호 의원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중앙위에 상정된 혁신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전반적인 혁신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혁신위가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평가 만능주의가 의정활동의 관료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정 활동을 계량화 하는 객관성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학생이냐"는 불만이 제기됐으며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월 재보선 패배에 대한 분석이 미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 패인 분석의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최고위원제 폐지에 대한 혁신위의 월권과 지방선거 공천의 시도당 위임의 문제점 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동철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해 문재인 대표의 살신성인을 요구한다"며 "문 대표의 사퇴야 말로 이 시점에서 최고의 혁신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문 대표 체제 자체가 호남 신당론의 명분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홍 의원도 "김동철 의원의 발언에 담겨있는 진정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황 의원은 "문 대표의 대표직 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10%대인 반면, 잘못한다는 평가가 60%대에 이른다"며 "이는 문재인 개인보다는 친노로 상징되는 진영정치에 대한 불신이며 호남 민심은 이대로는 확장성이 없어 총선,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혁신위도 사무총장제 폐지 등 지엽적인 당내 문제보다는 안보, 경제, 복지 등 보다 큰 혁신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혁신위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친노 대 호남 프레임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분열의 프레임"이라며 "호남 민심은 당을 쪼개고 분열하라는 것이 아닌 혁신하고 통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당내 신당론자들을 겨냥했다.

이개호 의원은 "호남 민심이 언뜻 보면 어수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는 새정치연합이 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강력한 비판을 보내고 있지만 이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라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 혁신안에 통과되긴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짐에 따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및 교체지수 확정, 정체성 확립 방안, 최고위원제 폐지 등의 혁신안 추인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진영 간의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의결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김성곤 중앙위원회 의장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하반기 '노동개혁' 올인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인하·근로시간 단축 등 당력 집중

김무성 "표 잃더라도 강행"…양대노총 총파업 등 긴장 고조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에 '노동 부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즉 '노동·금융·교육·공공 개혁' 가운데 공공분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상반기에 달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나머지 중 가장 중요한 노동 개혁에 전력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하반기 정국은 노동 개혁 문제를 놓고 여와 야,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재계와 노동계 등으로 갈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 개혁"이라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주말인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우리가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은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한 다음 날로, 임기 3년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박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노동 개혁'에 총대를 메달라는 별도의 주문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근로시간 단축 ▲경직된 고용 시장의 유연화 ▲실업 급여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승남,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확보'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0일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장의 업무와 지휘·감독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소속의 해당 실무자(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진상규명 활동이 정부의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소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해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할 경우, 세월호특조위 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국정원 해킹' 해법 합의 불발…오늘 원내대표 회동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20일에도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국회 긴급현안질의와 청문회, 국정조사에 검찰수사까지 요구하며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을 민간인 사찰로 연결한 새정치연합의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안보 괴담 장사'라고 맹비난하며 맞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과 이번 사건을 언급, "두 사건 모두 맥락이 같다고 본다"며 "국정원이 평소에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선거 때가 되면 공작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상임위 4개의 청문회와 국회 긴급현안질의, 특위 가동, 국정조사, 검찰수사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안질의에도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적이 없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사회를 '빅시스터' 사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오명을 받기 전에 빨리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무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국정원을 흔들어댄 결과가 무고한 직원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의혹 부풀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트려선 안 된다"면서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유서를 남긴 국정원 직원 임모씨를 언급한 뒤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일 계속되는 새정치연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정치 상품화한 안보 장사"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괴담만 퍼트리는 괴담 장사"라고 폄하했다.

한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민간사찰의혹 규명을 위한 국가정보원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1일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다시 논의키로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전남도당위원장 김중대씨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중대 여수 갑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20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당사 4층 회의실에서 2015년 제3차 도당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김중대 위원장을 선출했다.

김 신임 도당위원장은 여수 출생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특보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수시(갑) 지역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 전남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